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의 의미와 전망

전 병 곤

통일연구원 연구기획팀장

5년 임기의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大)가 향후 중국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10월 21일 폐막되었다. 이어 개최된 중국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7期1中全會)에서는 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번 대회는 2012년까지 중국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결정한 이후 약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3위권의 단일 경제규모로 부상함으로써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제고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존재한다. 즉,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에너지·자원 고갈, 투자 감소, 지역·계층간 격차와 부패·소수민족문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 등은 중국의 성장을 둔화 내지 정체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상기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력성장을 이룩해 2020년경 미국에 맞서는 세계 2위의 신흥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어느 전망이 현실화 될지는 바로 17대 기간 중 중국이 대내외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민주정치체제와 자유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는 국가로 변할지,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사회주의를 유지할지, 아니면 시장경제체제를 운용하면서 중국식 민주와 법치질서를 구축한 권위주의체제로 이행할지의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17대의 결과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첫째, 안정적인 발전의 추구이다. 17대 개막식에서 후진타오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 1인당 GNP 3,500\$ 수준) 건설을 강조하였다. 이는 2020년을 목표로 한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달성을 위해 덩샤오핑 이후의 개혁개방 노선을 계속 견지함으로써, 개혁개방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기존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당과 민족 등 전체 국가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17대는 16대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내실 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후진타오 집권 2기의 출범을 의미한다.

둘째, 금번 17대의 결과는 합의와 타협의 산물이다. 이번 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분배'에 치중하기보다 '발전'을 중시하는 데 합의했는데, 분배를 강조하는 후진타오의 '조화(和諧)사회론'이 당장(黨章)에 삽입되지 못하고 대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은 '과학적 발전관'이 삽입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는 과정에서 합의와 타협이 이루어졌다. 이는 마치 후진타오와 장쩌민 계파간의 정치 갈등 내지 권력투쟁으로 확대 해석되거나 오해되기도 한다. 물론 당내 다양한 견해와 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 점은 공산당 일당 독재가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까지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퇴직 연령 및 3선 금지와 같은 합의와 관례는 존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타오가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합의를 이루려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17대는 후진 타오를 정점으로 업무분장과 합의를 중시하는 집단지도체제의 출범을 의미한다.

셋째, 당내 민주화와 정치개혁의 점진적 확대이다. 이번 17대에서는 당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 당 기율검사위원을 당선자보다 후보자가 많은 제한적 경쟁선거 방식인 차액(差額)선거를 통해 선출했다. 중앙위원의 경우 16대에서는 후보자가 당선자보다 5% 많았으나, 이번에는 8.3%로 확대되었다. 또한 후진타오 이후의 차세대 지도자로 시진핑과 리커창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중용하되 어느 일인을 지명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경쟁을 통한 성과와 능력 위주의 인사를 예고했다. 앞으로 어떤 방식이 도입될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당의 직접 통치가 아닌 국가기관을 통한 간접통치와 민중의 '질서 있는 참여(有序參與)'를 위한 법제화도 중국의 정치발전을 이끌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조화'의 대내외적 연계이다. 대내적으로 중국은 조화사회의 건설을 위해 농민, 이주노동자 등 개혁개방으로 소외된 계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분배와 교육, 주택문제 등 민생에 주력할 것과 국민경제의 '좋고 빠른(又好又快)' 발전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회 안정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가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대외적으로 '조화아시아(和諧亞洲)', '조화세계(和諧世界)'의 조화외교로 연결된다. 즉, 발달한 국가와는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개발도상국가와는 단결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우호협력을 중시하면서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평화로운 주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실리적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요컨대, 17대는 2020년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개방과 조화롭고 안정적인 경제발전 추진에 합의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는 내년의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무역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17대의 5년은 향후 발전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를 지켜볼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오늘날 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면서 자본주의를 '중국적'으로 수용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경험은,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의 부작용에만 천착해 있는 북한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17대를 통해 중국은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깊이 개입될 것이고 5세대 지도자들의 대미 중시 성향까지 감안하면 북중관계의 변화 추세도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2007 남북정상회담과 연내 핵불능화 합의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북한 지도부로서도 중국의 경험을 북한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적용할 수 있는 '통 큰'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